

# 코로나시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서의 대전광역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 I

### 행사개요

- 일 시 : 2021.1.19.(화) 14:00 ~ 16:00
- 장 소 :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활용(ZOOM)
- 주 최 : 대전광역시의회
- 주 관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내 용 :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현황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 좌 장 ▶

- 우승호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 발제자 ▶

- 조민제 !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 토 론 자 ▶

- 최명진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유승화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최용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 배 석 ! 문자·수어통역사

## II

### 주요내용

#### □ 발제내용

##### ○ 조민제 /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시 장애인에 대한 방역지원 사례를 발표함.
- 확진될 경우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누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13명의 장애인이 자가격리 될 상황에 놓이자 민간 활동가들이 보건당국과 시청에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장애인당사자와 동행격리를 하였음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확진 시 병상 포화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확진된 채로 홀로 생활을

하라고 보건당국이 안내하여 민간 활동가가 동행격리를 지원하고 조속한 병원 입원을 촉구한 끝에 의료원으로 입원이 이뤄지게 됨.

-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했을 만큼 공백상황이 심각하였고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6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함. 그러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차원이었으며, 입원 시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대전시가 시급히 검토하였으면 하는 정책으로 1) 대전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2) 장애인단체-대전시 장애인복지 및 보건담당부서와 민관협의체 운영, 3) 코로나19 장애인전담 병원 지정, 4)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파견 서비스 운영, 5)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협의를 제안함.

## □ 토론내용

### ○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에게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황과 욕구 파악하는 전화 한 통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함.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자체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대응 및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서비스를 중단하고 휴관하라고 하는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지 시스템이 필요함.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자와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수칙이 만들어져야 함. 비대면 상황에서 원격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속 보장, 원격 학습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제공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와 장애인 권리지침을 준수해주길 바램. 위기상황에 대한 핫라인과 긴급대피소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상황 모니터링을 요청함.

### ○ 최용빈 장애인복지과 과장

- 대전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 서비스체계 구축관련 자체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 모집 중에 있음.
- 장애인단체와 우리시 장애인복지과 및 보건담당부서와의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는 현재는 없음. 코로나 시국에서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어 관련부서와 소통 채널 창구 개설 검토하겠음. 각 단체들과 장애인복지과와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예산이 동반되는 부문이나 행·재정 여건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예산 확보 및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및 시 자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방역지침 준수할 수 있도록 종사자 들에게 교육을 대체 하였으며, 2020년 12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제작한 생활시설 생활방역 매뉴얼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내 시설 등에 배포 중에 있음. 또한, 서울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참고로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자체 매뉴얼을 제작 예정임.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교육 여건이 되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

## □ 마무리

### ○ 우송호의원

- 대전 장애인의 감염병·재난상황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참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장애인단체-대전시 장애인복지 및 보건담당부서와 민·관협의체 운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등의 대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례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임. 이는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기 개입하여 현황 파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휴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적절한 파견 서비스 운영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임.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시설 간 민관협의를 통해 업무지침 제작이 급선무로 필요함.
-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간 코로나19 대응 역할강화 교육 및 협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전시와 지역사회복지시설이 구심적 역할을 하여 부족함을 채워 나가면서 시의회는 필요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위해 빠르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계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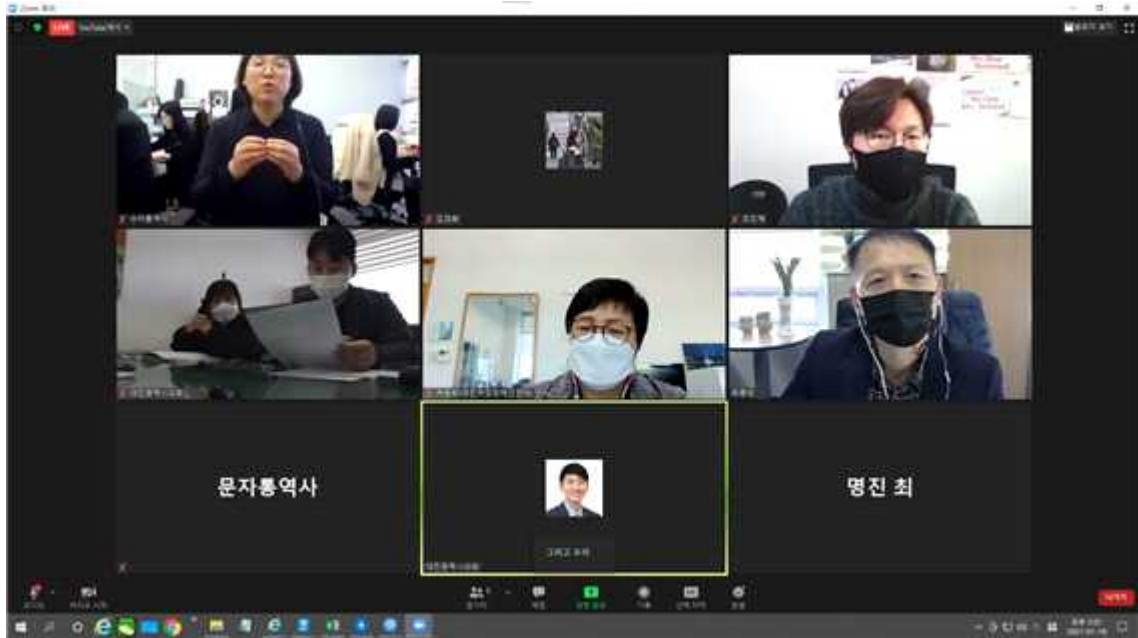
## 향후계획

○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대전시 장애인의 감염병 및 재난 관련 정책 제안과 효과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및 지원

별첨

화상토론회 사진

화상토론 모습



## 발제

